

5·18 왜곡 판치는데...대책위 뭐하나

인터넷 가짜뉴스 여전...모니터링 지난해 140건 뿐 초기만 반짝하다 최근엔 활동 뜸해 역할론 의문 제기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에 대한 왜곡·편향적 보도가 재연되면서 5·18 왜곡·편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3년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수립된 동안 지속되는 5·18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왜곡대책위는 구성된 초기에만 반짝 활동했을 뿐 이번 이슈가 커진 최근까지는 뚜렷한 활동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지난 2013년 광주시장과 시교육장 등 광주 단체장과 오피니언 리더 등 사회 지도층이 모여 구성된 왜곡대책위는 5·18에 대한 왜곡을 뿌리뽑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왜곡대책위는 지난 2013년 5·18 희생자

의 관을 '홍어택배'로 비하한 일베 회원들 검찰에 고발, 처벌받게 하기도 했으며, SNS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짜뉴스 140건에 대해 방통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올해로 7년째인 왜곡대책위의 활동은 1년 평균 30여건에 그치고 있다.

왜곡대책위는 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지만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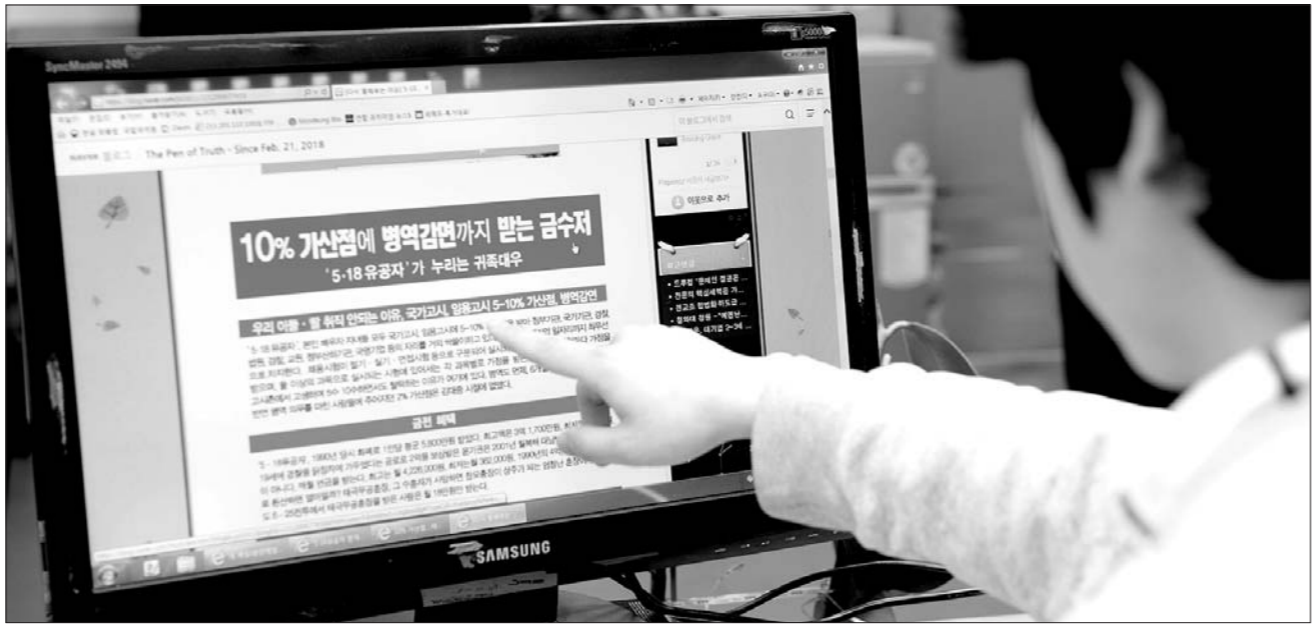
그러나 지만원은 이후에도 꾸준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 유튜브에 '5·18 바로 알기'를 검색하면, 지만원의 가짜 뉴스만 눈에 띈다. 왜곡대책위가 5·18 바로 알기에 소홀하다는 반응이다.

왜곡 대책위는 또, 한국당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을 때, '국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제시하거나 '5·18기념공원에 있는 희생자 명단을 통해 유추하라'는 등의 대응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왜곡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는 5·18 왜곡과 관련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 조직으로 광주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중장기적으로 5·18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막고 5·18 특별법과 함께 홀로코스트 부정법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서충대기자 zorba85@srb.co.kr



자유한국당 일부의원의 5·18 발언에 이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의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 정치권이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왜곡대책위)는 지난 12일 광주지역 민·관·정·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5·18역사왜곡차별 광주운동본부부를 구성, 15일 운동본부 출범식인데 이어 16일 광주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5·18역사왜곡차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결기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에서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5·18역사왜곡차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실규명을 위한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왜곡대책위는 그동안 온라인과 SNS 중심이던 5·18 왜곡·편향에 한국당 의원 3명의 발언을 계기로 제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목욕쿠폰 제공 군의원 부부 벌금

광주지법, 군의원 90만원·남편 25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 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목욕쿠폰을 제공한 담양군의회와 배우자가 각각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6)씨와 담양군의원 B(54)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초 지역 단위 농협 관계자 3명에게 목욕 쿠폰 130매(10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9일 A씨가 사용하고 남은 입욕권 5매(4만5천원 상당)를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

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 아닌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격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선거운동부를 입은 채 자신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면서 별다른 친분이 없던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했고, A씨는 농협 관계자에게 적지 않은 가액의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부부가 지급한 입욕권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B씨가 기부행위를 한 이들과 평소 선물을 주고받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허위 사실 유포 장성군수 캠프 인사 집유

법원 "고소인에 2차 피해 등 엄중한 처벌 불가피"

유두석 장성군수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 후보가 여성 운동원을 매수해 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유 군수측 선거캠프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비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데다, A씨가 유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성폭력 사건 고소인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201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쯤 장성군 유 군수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윤시석 후보 측이 유 후보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인을 매수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3천66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유두석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 등을 담당했다.

유 군수는 여성 군민들과 회사 자리에서 한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검찰, '손혜원 땅 의혹' 목포시청 압수수색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3세 유아들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한 아이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고 끌고 가 양손으로 몸통을 잡고 세계 흔들는 등 27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

문화재청도 함께... '문화재거리' 지정 경위 문건 확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목포 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목포시 '문화재거리'의 문화재 지정 경위가 담긴 문건을 확보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지난해 20일 탈당했다.

시민단체 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

'곡성 실종' 용의자 긴급체포

곡성에서 실종된 50대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된 가운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곡성경찰서는 19일 실종된 A(59)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B(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가족과 통화한 후 연락이 끊

끼지 가족들이 다음날 오전 8시40분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곡성군의 한 도로 갓길에 세워진 A씨의 SUV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 등을 찾았다.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18일 오후 10시50분쯤 광주 모처에서 은신해 있던 B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와 A씨의 행방 등을 추궁하고 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광주 CBS

광주 CBS 음악FM

2019. 1. 9 개국

CBS 인터넷 라디오
개인방송

CBS RADIO

한동준의 <FM팝스>
14:00~16:0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6:00~18:00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18:00~20:00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0:00~22:00

Less Talk More Music

최고의 음악채널

광주 CBS 음악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09:00~11:00

서수현의 <매일 주와 함께>
11:00~12:00

FM 98.1 MHz

■ 대구CBS FM 103.1 / 안동 FM 92.3 / 음악FM 97.1 ■ 부산CBS FM 102.9 / 음악FM 102.1 / 서부산 음악FM 105.3 ■ 광주CBS FM 103.1 / 음악FM 98.1 ■ 전북CBS FM 103.7 / 남원 FM 90.7 / 고창 FM 96.3 ■ 강원CBS FM 93.7 / 홍천 FM 93.7 / 원주 FM 94.9 ■ 대전CBS FM 91.7 / 홍성 FM 99.3 ■ 울산CBS FM 100.3 ■ 포항CBS FM 91.5 ■ 경남CBS FM 106.9 / 진주 FM 94.1 ■ 제주CBS FM 93.3 / 서귀포 FM 90.9 / 어음 FM 90.9 ■ 강원영동CBS FM 91.5 ■ 전남CBS FM 102.1 / 순천 FM 89.5 ■ 청주CBS FM 91.5